

현대그룹-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 의미

통일정책연구센터

합의 사항 실현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 필요

현대그룹과 북한 당국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를 비롯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평양 8.17). 양측의 경협사업 재개에 대한 합의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보도문은 남북 당국 간 합의문이 아니기에, 합의 사항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공동보도문에 대해 “정부가 전달한 별도의 메시지는 없다”고 하면서, “현회장이 제반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는 현대가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역시 귀환 성명을 통해 합의 사항에 대해 정부와의 “사전 조율이 없었고” 앞으로 협의·조율해서 잘 해나가겠다고 하면서, “당국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추진해 나갈 입장임을 밝혔다.

이번 합의 사항을 보면 북한은 전반적으로 남북경협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듯하다.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정부의 남북 3대 경협 사업이었으며, 백두산관광 사업은 ‘10·4 선언’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한 당국 간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제한한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북측 지역 체류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남한 당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대그룹과의 합의를 통해 남북경협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당국 차원에서 이번 합의문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먼저 요구된다.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해 왔던 재발방지책 마련 및 유감 표명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현회장과 그의 묘향산 오찬(8.16)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유감의 일단을 표명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남북경협이 과거 패턴의 반복은 거부되어야

이번 합의가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크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풀리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바탕 위에서 보다 주도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관계의 향방이나 국제사회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게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북 관광 사업이 재개될 경우 현금 지불 방식은 재고되어야 하며, 현물 등 다른 방식의 관광 대가 지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남북경협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남북경협 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하되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접근할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 합의로 '정부 압박, 현대 활용, 남남 갈등'의 세 측면의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도 있다.

대북 실용정책과 대남 실리추구의 접점을 찾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현대그룹과 북한의 아태평화위가 합의한 내용이 미래지향적 남북관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적지 않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정책의 원칙은 지키되, 정책적 실천 차원에서 다소의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재개는 남북관계 발전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통 큰 합의'가 없다면 그들이 바라는 '실리추구'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합의 사항을 하나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실무 차원의 당국 간 대화가 곧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실용정책과 북한의 실리추구가 서로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